

##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낙후된 경기북부 경쟁력 키운다

최현호 기자 | 승인 2021.09.12 13:49

인천·강원과 손잡고 초광역적인 사업연계

### 경기북부, 인천·강원 접경지역 연계 가능사업

남북협력 분야	경기북부 접경지역 실천사업	인천 접경지역 연계 가능사업	강원 접경지역 연계 가능사업
생태·문화·평화·관광	·(연천) 국립 제3현충원 건립	·(강화) 교동 문화관광지구	·(10개 접경지역) DMZ 평화누리길
산업·경제	·(파주) 통일특구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교통인프라	·(연천-동두천-양주) 경원선 복원 및 고속 철도 유치	·(옹진) 우뚝가사리 조성사업	·(철원) 경원선 복원 및 금강산선 복원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 등에 비해 낙후한데다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경기북부의 경쟁력을 높일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를 비롯해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원도 간 연계사업과 경기북부 도시간의 연계사업이 낙후된 도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대안으로 떠올라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주

경기북부가 경제적인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과 초광역적 연계사업을 진행,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접경지역 간 선제적 협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협력사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실천사업 총 12개와 함께할 연계사업으로 인천 5개, 강원 14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총 5개 남북협력 분야인 ▲DMZ 생태·문화·평화·관광 ▲산업·경제(통일특구 및 산업·물류단지 등)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인적교류(교육·문화·의료·보건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등으로 구분됐다.

접경지역 간 협력사업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 사업 가운데 'DMZ 생태·문화·평화·관광 분야'는 연천의 '국립 제3현충원 건립 사업'과 연천·포천의 '임진강-한탄강 주상절리길 생태·문화·평화 관광루트 조성', 김포시의 '포구 및 나루벚길 복원사업'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은 인천의 '교동 문화관광지구', '경기만·서해5도 국제관광특구' 사업과 강원도의 'DMZ 평화누리길'(10개 접경지역), '해안 편치불 지방정원 조성'(양구),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인제)' 등과 연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북부의 '파주 통일특구'와 '통일특구 JDS지구와 연계한 남북 영상문화단지(고양) 사업은 '교동 평화산업단지(강화), '서해남북평화도로'(인천), '평화산업단지(철원)' 등과 함께 산업·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관련 사업인 '경원선 복원 및 소속철도 유치'(연천-동두천-양주)는 '우뭇가사리 조성사업(옹진), '경원선 복원 및 금강산선 복원(철원), '동서평화고속도로'(강원), '동해북부선(고성) 등과 연계 시 시너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와 강원도가 맞손을 잡는 모델도 제시됐다. 경기북부의 '온릉 개방을 통한 남북 문화재 교류(양주),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포천)은 강원도의 '평화통일대학원 유치(고성),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강원) 등과 연계가능할 전망이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접경지역 연계사업은 각 지자체 실무자 면담과 중앙부처 실무자,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됐다"며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호 기자